

내달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특수고용직〉

고용노동부, 개정안 의결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사업주와 보험료 절반씩 부담
소득감소로 이직엔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으로 정했다.

근로 계약에 따라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 신청을 하고 그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됐다. 특고는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비자발적 실업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다.

소득 감소로 이직할 경우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고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

만6000원으로 일반 근로자와 같다.

특고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고가 사업주의 암묵적 강요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의를 신청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특고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사유를 제한했다.

다만,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제의 신청 제한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상 직종과 경감 수준 등을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수소전문기업 11곳 첫 지정 R&D·인력 등 전방위 지원 산업부 “2040년 1000개 육성 목표”

수소법상 수소전문기업 11곳이 첫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자금 조달과 인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유한정밀을 방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첫 지정된 11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유한정밀, 제이엔티지, 가드네, 이엠솔루션, 대하,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에스퓨얼셀, 지필로스, 하이에어코리아, 원일티앤아이 11곳이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소전문기업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방소멸 위기 적극 대응” 산업부, 인구감소지역 선정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의를 갖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탄소중립 가속화... 환경부 조직개편 단행

기후탄소정책실 신설
물관리 과제 발굴키로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을 새로 두기로 했다. 홍수 대응 등 일관성 있는 물 관련 정책을 위해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생활환경정

책실과 자연환경정책실을 통합해 기후탄소정책실을 신설한다.

하부 조직으로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을 두기로 했다. 또, 탄소국경세 논의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도 하부에 새로 둔다.

앞으로 기후탄소정책실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도 힘쓰기로 했다. 탄소중립 관련 국제사회와 협업을 강화하고,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물관리정책실도 신설하고, 물통합정책국·물환경정책국·수자원정책국 등 기존 물 관련 3국은 하부 조직인 정책관으로 구성한다.

물관리정책실을 통해 물 관련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기

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달 확정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국민체감형 통합물관리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댐 주변 ‘재생에너지 100%(RE100) 산단 조성’ 등 물분야 탄소중립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댐-하천 연계 체계를 정비하는 등 홍수기 수해 예방을 위해 일원화된 지휘 체계도 마련한다.

자연보전, 자원순환, 환경보건 부문은 각각 차관 직속의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예비군 백신’ 예약 러시... 서버 먹통

접속자수 폭발로 지연 등 오류
일부 명단 누락 등 본인인증 에러

1일부터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대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폭발적인 접속자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했다.

대상자들에게 투여되는 백신은 미국 정부가 한국군을 위해 지원하는 존슨앤존슨사의 안센백신으로, 1회 접종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력이 60% 이상 확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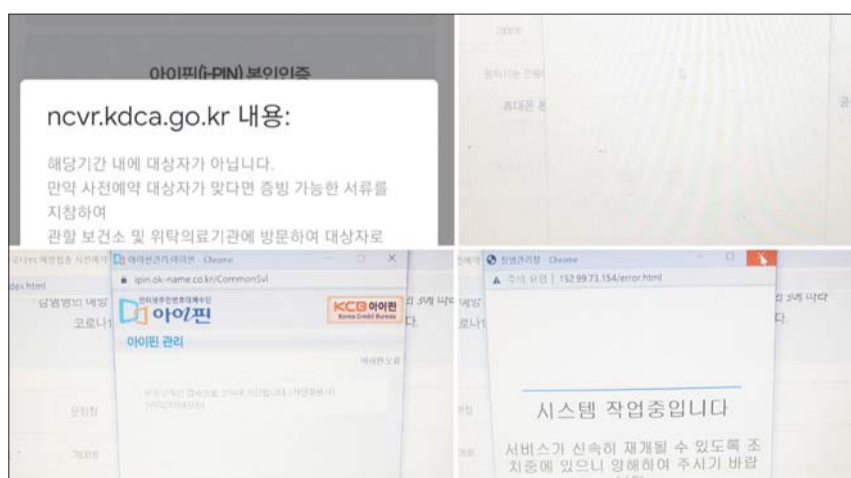
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열리는 백신접종 예약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전날 오후 11시 55분부터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과도하게 몰린 접속열풍으로 20분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4차례 접속실패 끝에 0시 20분 서버에 접속이 됐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예약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오류메시지가 나왔다.

만 42세 예비역 소령으로 비상근무 예비군인 기자는 국방부가 전날 밝힌 백신접종 대상자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백신접종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청에 취합해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버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끊겼다.

3차례 추가 시도 끝에 재접속이 됐지만,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만 가능했다.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 방법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두 인증 방식은 접속 자체가 불가능했다. 40차례 이상 접속을 시작했지만, 결국 ‘시스템 작업중’이라는 오류메시지가 뜨면서 서버 접속이 종료됐다.

본인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로 바꿔 백신접종 예약을 시도하자 겨우 예약접수가 완료됐다.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됐다.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소속 예비역 A 소령도 동일 시간대 접속을 시도했는데 약 30분이 걸렸다. A 소령은 “본



30세 이상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등을 상대로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서버가 1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문형철 기자

인인증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먹통이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출입기자인 B씨도 “접속대기 15분 만에 본인 인증을 시작했지만, 휴대전화 인증 오류가 반복됐다”면서 “약 45분만에 백신접종 예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이런 접속 오류는 상당시간이 걸려서야 안정화 됐다.

오전 8시 이후 백신접종 예약 서버에 접속한 복수의 예비군 간부들은 “서버 접속 초기에 접속자가 많이 몰

려 예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마조마했지만, 현재는 서버의 문제가 안정화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본인인증방법의 오류에 대한 정확한 사전점검과 주의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한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과 예비전력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교복브랜드 4개사 대리점 교복구매 입찰 담합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킨룩스 효자점 등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이들 사업자들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을 썼다.

/세종=한용수 기자